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석 내용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유민호 분석관

2026년도 예산안 개요

- 2025년 9월 3일 정부는 ①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중점 투자분야로 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202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674.2조원, 총지출은 728.0조원 규모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2.0\%$, 관리재정수지는 $\Delta 4.0\%$ 적자, 국가채무는 1,415.2조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가(+20.4조원)하였고, 증가율 측면에서는 R&D 분야가 19.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교·통일 분야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Delta 0.7$ 조원)

[표 1] 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요약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제2회추경(A)		B-A	(B-A)/A	
재정 규모	총수입	651.6	642.4	674.2	31.8	5.0
	국세수입	382.4	372.1	390.2	18.1	4.9
	총지출	673.3	703.3	728.0	24.7	3.5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	$\Delta 21.7$	$\Delta 60.8$	$\Delta 53.8$	7.0	-
	관리재정수지	$\Delta 73.9$	$\Delta 111.6$	$\Delta 109.0$	2.6	-
	(GDP 대비)	($\Delta 2.8$)	($\Delta 4.2$)	($\Delta 4.0$)	(0.2)	-
	국가채무	1,273.3	1,301.9	1,415.2	113.3	-
	(GDP 대비)	(48.1)	(49.1)	(51.6)	(2.5)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

▪ 「2026년 NABO 경제전망」 기준 2026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망

-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재정확대, 완화적 금융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하면서 내수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할 전망
- 美 관세정책이 세계교역 전반에 걸쳐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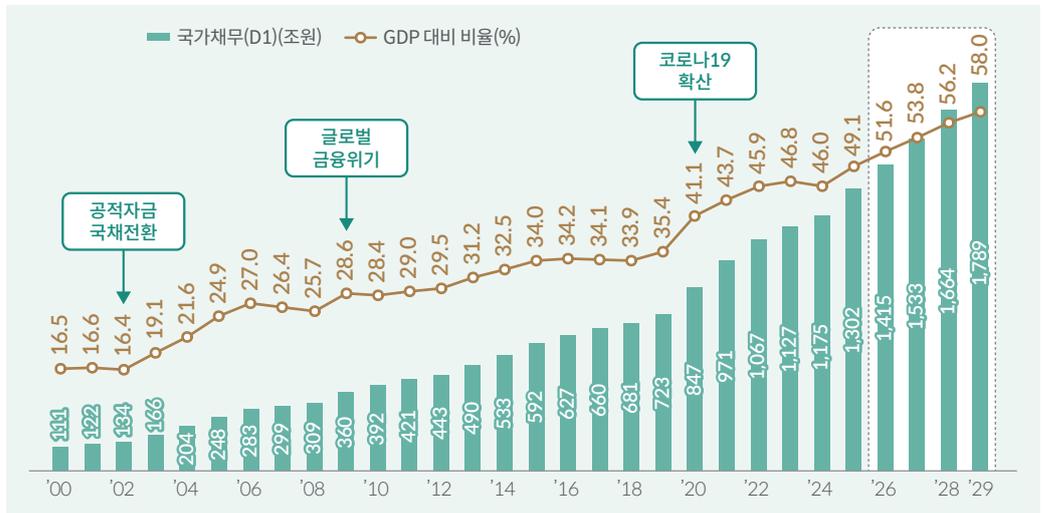
▪ 경기회복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필요성

- 그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다만, 재정정책의 효과는 분야·부문별 구성과 개별 사업의 효과성에 크게 의존하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재정지출 확대 과정에서 유사·중복적 사업의 증가, 사전 계획 미흡 우려가 있고, 기존 사업의 개편이나 확대가 경제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재정부담 초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재정 건전성 지표 관리와 세입기반 마련 필요성

-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로 전망

[그림 1]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주: 2025년 수치는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 지난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만큼 세입기반 없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이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채무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이행계획이 제시될 필요

[표 2]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제2회 추경	전망				
국가채무	1,175.0	1,301.9	1,303.6	1,415.2	1,532.5	1,664.3	1,788.9
적자성 채무	815.2	924.8	926.5	1,029.5	1,133.0	1,248.1	1,362.5
(비중)	(69.4)	(71.0)	(71.1)	(72.7)	(73.9)	(75.0)	(76.2)
금융성 채무	359.8	377.1	377.1	385.7	399.5	416.2	426.4
(비중)	(30.6)	(29.0)	(28.9)	(27.3)	(26.1)	(25.0)	(23.8)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6년도 주요
정책·사업 분석 ①
- AI 3대 강국 도약
지원 예산안

▪ AI 3대 강국 도약 지원 예산안(10.1조원, 전년 추경 대비 +4.5조원)

- AI 예산 편성 기준 마련, 부처간 유사사업 편성 방지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 필요
- GPU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28년까지 약 5만장 확보 계획)
 - 정부구매 고성능 GPU의 배분 방식, 사용료 부과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므로 민간 주도 국가AI컴퓨팅센터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AI 인재양성 지원의 경우, AI 교육 시간과 공간,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및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AI 지원은 중복 편성된 측면을 고려하여 차별화 필요

2026년도 주요
정책·사업 분석 ②
- 통상 현안대응·수출지원 예산안

▪ 통상 현안대응·수출지원 예산안(4.3조원, 전년 추경 대비 +2.25조원)

- 韓·美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관련
 -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9조원이 편성(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되었으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방식과 내용, 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 출연·출자 규모의 조정 검토 필요
- 韓·美 조선·방산 협력 사업의 양국간 명확한 협의 및 부처간 연계 추진 필요
 - 한·미 조선·방산 협력 관련 양국간 협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MOU체결 등 협의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심사 필요
 - 함정 MRO 중소·중견기업 지원 관련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 간 사업 연계추진 필요
-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의 유연한 집행 및 부처별 수출바우처간 사전 중복 배제 필요
-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 필요

2026년도 주요
정책·사업 분석 ③
- 재정사업 지방
우대 정책 분석

▪ 재정사업 지방우대 전략 수립, 7개 시범사업 정부 지원의 차등화 예정

- 정부는 인구감소·낙후도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특별지역(40개)/우대지역(44개)/일반지역(83개)으로 구분하고, 정부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

- 그러나 중앙-지방의 재정분담 수준, 정책 추진을 위한 해당지역 인프라와 실수요, 재정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대혜택 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훈련기관 부족 문제
 - (아동수당 및 지역사회사랑상품권) 동일한 국고보조율로 지원 단가·물량을 확대하여 재정여력이 낮은 특별·우대지역의 지방비 대응 부담이 증가
- 2026.10.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재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성과 달성 지자체가 제외되어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지원 축소 등 해제 기준의 정교화 필요
 -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2021.10. 지정)

2026년도 주요
정책·사업 분석 ④
- 그 외의 분석내용

▪ 산재보험 관련 예산안(8.1조원)

- 역학조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증원과 산업안전감독관 증원(2025년 895명→2028년 3,000명)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안(3.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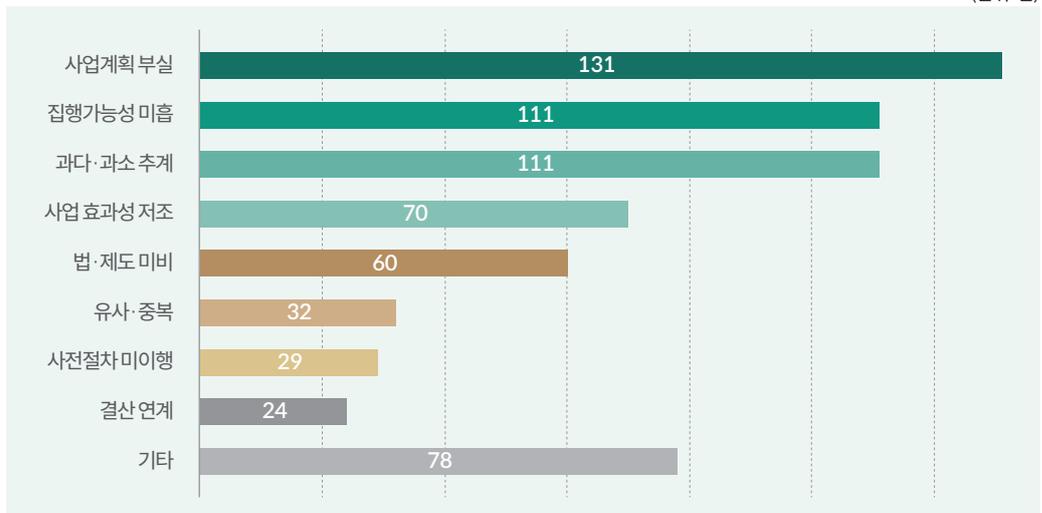
- 세대간 형평성 확보, 제도 변경 및 중복사업 최소화, 제도간 연계 강화를 통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제도 보완 및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조정체계 마련 필요

▪ 정책펀드 사업 예산안(국민성장펀드 1조원,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1.1조원 등)

- 정책펀드 간 투자분야 중복 문제 해소 필요
 - 정책펀드 종류 및 출자규모 증가에 따른 투자분야 중복 문제 발생 우려
- 정책펀드 운용 현황에 관한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근거 마련 필요
 - 펀드 운용 현황 및 투자실적 점검, 펀드 출자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및 채투자 관련

[그림 2] 각 부처별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유형별 현황(총 646건)

(단위: 건)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참조